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전쟁 리스크 증대 중에
머뭇거리는 트럼프
3면

클라우드비츠의 프레임으로 본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5~8면

노동자 투쟁 소식
한국노총 레미콘 노조 파업 9면 / 카카오 노동자 투쟁 10면
[기고]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하라 9면



지방선거 이후

기지가 펴는 극우 국힘

곤경에 처한 민주당

관련 기사 2, 11~12면

서울시장 예비후보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 위기에 처한 여당

6.3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동안 급반등했다. 41퍼센트를 넘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다.

장동혁 사퇴론은 국힘 내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청래 책임론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을 꼽는다. 그러나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행정부와는 구별되는 독립 조직이다. 오히려 선관위 위원장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진정한 원인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실패한 데 있다.

민주당은 법과 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 국힘은 오히려 살아났다. 내란 주동자급 개인들 몇 명만 감옥에 있을 뿐이다.

또, '일 잘하는 후보'라는 보수적 슬로건을 내세웠다. 수십 년 동안 집권해 왔고, 4년 전에도 집권한 국힘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은 선거 구도를 민주당 스스로 만든 셈이다.

주요 선거구에서 패배

무엇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 자리를 지켰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2곳에서 승리했다지만 서울은 나머지 15개 시도와 비할 바 없이 비중과 영향력이 큰 지역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산에서도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에 패했다.)

오세훈은 장동혁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보수 표를 결집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이재명이 띄워 준 '명픽' 정원오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하지 않았고, 변화와는 반대되는 보수적 관료 뉘를 강조했다. 더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국힘의 추격세를 감지하고는 투표 직전야 '내란 청산'을 호소했지만, 진정성 있게 보일 리 만무했다. 많은 진보적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의 호소는 내란 청산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불신만 심어 줬을 것이다.

오세훈은 자신의 임기 말 서울시가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과 어울리지 않는 후보들과 미미한 가치를 내세워 실패를 자초했다

발주하거나 관리한 대형 안전사고 두 건이 잇따라 터졌는데도 승리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정원오는 훨씬 큰 표 차로 패했을 것이다.

대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이 윤석열의 부하 추경호에 밀려 낙선했다. "보수의 심장"이라지만, 국힘의 지지부진 속에서 여당이 첫 승리를 기대하던 지역이었다. 김부겸은 추경호를 내란 주요임무 중 사 혐의자라고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지며 자기도 보수 후보임을 자처했다. 하지만 정작 박근혜는 추경호를 도우며 우파 단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경남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후보가 낙선했다. 당시 민주당은 '과정의 공정성'과 '도덕적 우위'를 내세워 보수 진영과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그 사건으로 김경수의 위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승리라 말하기 무색할 지경이다.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충남에서는 국힘이 압승했다. 서울에서도 8개 구에서 국힘 후보가 당선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여유 있게 이긴 인천과 경기에서도 각각 세 곳과 열두 곳을 국힘에 내줬다.

전국적 득표율을 보여 주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 합계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선거 전에 비해 오히려 4석을 잃었다.

평택에서는 '뉴이재명' 김용남이 낙선했다. 새누리당 출신에 윤석열 캠프

를 거쳤고 최근 대부업체(고리대금업) 운영 의혹까지 받은 김용남은 민주당의 진보적 지지자들이 투표할 만한 자가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조국도 "아빠 찬스"로 공정함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2030 청년층에게는 별 때력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평택 선거 결과로 조국도 큰 타격을 받았다.

윤석열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 탄압 앞잡이 노릇을 한 선명 극우 이진숙(대구), 김태규(울산)가 모두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언론에 얼굴을 내밀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구역질이 내려 한다.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에서는 한동훈이 청와대 출신의 또 다른 '명픽'이자 기술관료 하정우를 누르고 당선됐다.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중요하고 상징성이 큰 도시다. 한동훈이 윤석열과 선을 그었다고 해서 관대하게 봐줄 것은 못 된다. 윤석열의 법무부장관이었고, 쿠데타 미수 직후 한덕수와 함께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려던 자다. 장동혁과 신경전을 벌이겠지만, 국힘으로 돌아가 당권과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려고 할 것이다.

부산과 울산 시장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민주당은 막상 시장 당선자들의 기존 지역구를 모두 잃은 것이다.

반면, 국힘은 오세훈과 한동훈이라는 차기 대선 주자를 챙겼다.

국힘 소속이 아닌 극우이자 쿠데타 장교 김현태는 인천 계양에서 13퍼센트나 얻었다.

이처럼 여권은 후보 면면으로 보나 선거 운동 기조로 보나 흐릿하고 진보성은커녕 반우파 선명성도 없어서, 변

화를 기대하던 당의 진보적 지지자층에게 지지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

선거에서 살아난 극우는 분명 더 목청을 높일 것이다. 장동혁도 당 지지율 회복으로 체면치레는 한 셈이고, 이진숙, 김태규 등도 기고만장할 것이다.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부실 관리는 극우에 추가적인 기회를 안겨 줬다. 황교안과 전한길 등은 서울 송파 등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재빠르게 이용해 항의 시위에 나서면서 극우 결집을 시도했다. 이들은 투표 직전 미국 극우의 반이재명 메시지로부터도 힘을 얻었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범진보 후보가 10명 당선돼 4년 전보다 2명 늘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동성에 혐오를 전면에 내세운 조전혁이 114만 표나 얻어 2등을 한 것은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중도보수 확장 전략의 실패

보수 논객 정규재의 지적처럼 몇 달 전에만 해도 16대 0으로 국힘이 지는 선거였다. 그러나 중도보수 지향 전략으로 민주당이 살려준 셈이 됐다.

집권 1년 차 성적표를 받아든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하고 인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며 선거 직후 네이버 CEO 출신 기술관료 한성숙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중도보수 확장 전략이 통하고 있지 않음을 선거에서 확인했는데도 좌파와 노동운동의 도전이 미약해 오른 쪽만 쳐다보는 것이다.

주요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위해 해야 할 민주당 비판을 약화시키거나 삼가고, 그동안 의회와 선거 지향으로 대중 투쟁과 거리를 두다가 영향력이 약해져 이번 선거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했다.

물론 진보당은 4년 전보다 당선자 수가 2배로 늘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 약진했다. 그러나 진보정치 1번지 울산에서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음에도 광역과 기초 의원 각각 한 명씩만 당선됐고, 동구청장 자리를 잃었다.

장호중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전쟁 리스크 증대 중에 머뭇거리는 트럼프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 도널드 트럼프가 6월 7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결정하는 것은 그가 아니다.”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후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전화 지시를 거슬러 이스라엘군에 이란 공격을 명령했다. 앞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타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서아시아에서 전면전이 재개될 위험이 있다.

이 상황에는 서로 다른 두 줄기가 얽혀 있다. 하나는 트럼프가 2월 네타냐후와 함께 시작한 전쟁에서 빠져나오려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예상과 달리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권은 공습에서 살아남았고 반격에 나섰다.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들이 손상됐고, 이스라엘의 우방 아랍에미리트(UAE)가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

트럼프와 미국 군부는 네타냐후가 설득한 이란 정권 교체라는 애초 목표가 몽상임을 깨달았다. 트럼프는 얼른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야 하는 처지다. 갈수록 불만이 커지는 미국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할 기회를 갖기 전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협상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을 빨리 타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는 합의를 날로 먹으려 하고 이란에 되도록 적게 양보하려 한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 굴욕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란에 너무 많이 양보하면 미국의 패권이 걸프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한편 이란 정권은 곤경에 빠진 트럼프를 도울 이해관계가 없다. 이란에서는 전임 지도부가 살해당한 결과,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강경한 인물들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 이들은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버텨 낸 덕분에 자신감이 높다. 또한 트럼프를 조금치도 믿지 않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이란과의 핵협상 중에 공격을 가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억제할 힘이 있지만 그럴 의지와 수완이 있는지는 열려 있는 문제다

이 대목에서 둘째 줄기가 얽혀 든다. 이스라엘이 핵방꾼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한 세대 동안 미국을 상대로 이란을 공격하라고 로비를 벌여 왔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네타냐후의 전략 아닌 전략은 극단적 폭력으로 역내 모든 국가들을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이란에는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전쟁이 재개되기를 바란다. 그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사보타주하려 한다. <뉴욕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최근 미국 정보 당국 보고서들은 이스라엘 첩보기관들이 이란과 평화 협상 중인 미국 대표단을 도청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첩보 활동 전반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휴전에 대응하는 표준적인 방식은 ‘자위권’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 이란을 도발하려 해 왔다. 또한 이스라엘은 레바논 저항 운동 헤즈볼라를 파괴하고 싶어 한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일대를 점령하고 있지만, 유선 드론을 동원한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꽤나 많은 전사자를 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다시 한 번

폭격하자, 6월 7일 이란은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미국 대외 정책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트리타 파르시는 이렇게 논평했다. “이스라엘이 제 3국을 공격하거나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것에 맞서 이스라엘에 대항해 하드 파워를 행사할 수단·역량·의지를 갖춘 지역 강국이 있는 상황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

1980년대 이래로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등 아랍 강국들은 이스라엘 공군의 타격 대상이 될까 봐 몸을 사려 왔다.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를 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도하고 들어선 새 수니파 이슬람주의 정권은 자국 영토 내 요충지 일대를 이스라엘군이 점령하는 것을 허용했다.

반면 이번 전쟁에서의 선전(善戰)으로 고무된 이란은 역내에서 자신의 힘을 각인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신에게는 카드가 없다.” 반면, 이란 지도부는 자신에게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 카드는 상당한 양의 미사일과 드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능력,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면서 얻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이다.

물론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억제할 힘을 실제로 갖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그 힘을 이용할 정치적 의지와 수완이 있는지는 열려 있는 문제다. 트럼프에게 그럴 의지와 수완이 없다면 이는 그의 정권을 침몰시킬 수도 있다.

출처 Alex Callinicos, 'Trump hesitates as risk of war heightens' (2026. 6. 8) / 번역 김종환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제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86가길 5 3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3

성장률 회복에도 감소하는 실질임금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높였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퍼센트를 기록하며 직전 분기 1.6퍼센트에서 크게 반등했다. 1분기 수출은 38퍼센트 급증한 2,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5월 한국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53퍼센트나 증가한 877억 5,000만 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371억 달러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20대 기업 반열에 올랐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6월 2일 2,700 수준이던 코스피 지수는 딱 1년 만인 올해 6월 2일 8,80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기기, 조선, 군수산업 등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덕분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AI 분야의 실적 폭발로 기업이익, 임금,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해 가계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 중”이라고 성과를 자랑했다.

그러나 고환율·고금리·고유가의 ‘3고(高) 위기’가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 제품과의 경쟁으로 구조 조정에 돌입한 상황이고, AI 투자 거품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지금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와 전력기기 등의 산업도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노동계급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경제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고금리와 고유가 부담까지 겹친 상황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50원 넘어 물가 인상 압력을 주면서 노동계급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환율 상승이다.

그런데 5월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0.4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중 실질 근로소득은 1.7퍼센트 줄어 2024년 1분기(-4퍼센트) 이후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다. 월급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반면 고소득층 소득은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 1,456만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도 여피들과 달리 노동자들은 생활비 고통을 겪고 있다

명 중 대다수가 수백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자임을 고려하면, 주식시장 활황의 혜택은 소수의 자산가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고용률(15~64세)은 70퍼센트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하락해 43.7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45.6퍼센트)보다 1.9퍼센트포인트나 낮았다.

국가 경쟁력 회복이 우선

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과 달리 적극적 재정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대중 생활비 위기 속에서 재정 확대를 저소득층의 소득 일부를 보충해 줬다.

정부는 출범 직후 소비쿠폰 지급 등을 담은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정예안을 편성했고, 올해 3월에도 고유가 피해 지원 등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은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되고 있다. 예컨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시도에서 드러나듯이 첨단산업 투자 증진 정책은 공적 자금으로 기업 대신 부실 위험을 떠안는데, 그 혜택은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인색하다.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데에는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 대신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청년 1만 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을 늘리는 정책은 아니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양도세·보유세 인상 등을 시사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대다수 무주택 노동계급에게 그것은 직접적인 해답이 되지 못한다. 소수 고임금 노동자나 고소득 중간계급만이 다주택자가 어쩔 수 없이 뱉어낸 주택 일부를 구입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지 않는 한 대다수 노동계급은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주는 경고,” “나의 부족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정책을 이어 갈 뜻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

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며 말이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새 국무총리 후보로 네이버 CEO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그러자 경제6단체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한성숙 후보 지명을 환영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을 전면내 내세울 생각은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일자리 확대, 공공 일자리·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과 투쟁을 벌여야만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강동훈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선관위 향한 불신을 극우가 이용하고 있다
- ★ 서울대 극우 ‘트루스포럼’의 재선거 요구 시국선언에 맞선 행동
- ★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유물론이란 무엇인가 — 성과 젠더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 비판
- ★ 마르크스주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해방을 위한 투쟁
- ★ 노란봉투법 3개월 원정 교섭 회피에 맞서 노동자 하루가 성장해야 한다
-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산재 처벌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

클라우제비츠의 프레임으로 본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전쟁은 정치의 연속”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남긴 명제는 여전히 모든 전쟁 분석의 출발점이다. 즉, 전쟁은 독립 변수 같은 폭력이 아니라 “정치적 연속”이다. 정치적 목적이 목표이고, 전쟁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전쟁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어느 쪽이 폭탄을 더 많이 떨어뜨렸는가 아니다. 그 폭력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실제로 달성하고 있는가이다.

“의지의 충돌”

이 잣대를 올해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에 들이대면 핵심은 분명해진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중동 질서를 둘러싼 “정치적 의지의 충돌”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나 핵무장 능력의 문턱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려 한다. 이란의 미사일·드론 역량과 지역 동맹망을 약화시키고,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질서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으려 한다. 반면 이란은 체제 생존을 보장하고 제재와 봉쇄를 돌파하려 한다. 핵 프로그램과 해협 통제, 레바논·예멘·이라크 등지의 동맹·대리세력을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핵시설 파괴 여부라는 기술적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미국·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쟁이자, 이란 정권이 압박 속에서 체제와 지역 내 영향력을 지키려는 전쟁이다. 클라우제비츠식으로 말하면, 여기서 충돌하는 것은 무기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적 목적과 의지다.



클라우제비츠가 이란 전쟁을 본다면 군사적 승패보다 정치적 목적이 명확한지 물었을 것이다

“제한전”이지만 여전히 전쟁 상태

이 전쟁은 고전적 의미의 전면전과는 다르다. 미국은 이란을 점령하려고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고, 이란도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총력전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것은 전쟁이다. 제재, 해상 봉쇄, 핵시설과 군사 시설 타격, 지도부 암살, 사이버·정보전, 대리세력의 공격, 미사일·드론 교전, 외교적 고립이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형식은 바뀌었지만, 상대에게 자기 의지를 강요하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전쟁은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를 띠게 됐다.

이 공격은 이란의 핵·미사일 시설 뿐 아니라 최고 지도부를 겨냥했으

며,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지도부 타격이 이란 체제의 즉각적인 붕괴를 낳지는 않았다. 오히려 혁명수비대와 강경파의 영향력이 강화됐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고농축 우라늄, 지역 동맹망을 협상 카드로 움켜쥐고 있다.

외교와 전쟁

6월 9일 현재 상황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불안정한 휴전과 간헐적인 교전, 간접 협상이 병존하는 국면이다. 지난 4월 8일 휴전 이후에도 해협과 걸프 지역, 이스라엘·이란 전선, 레바

논 전선에서 충돌이 반복됐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연장과 핵 협상 재개를 두고 접촉하고 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 미국의 항만 봉쇄와 제재, 동결 자산 해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헤즈볼라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쟁점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국면은 협상과 위기, 제한전이라는 규정을 함께 포함해야 정확하다.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전쟁의 종식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협상은 전쟁의 또 다른 형태다. 클라우제비츠에게 외교와 전쟁은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동일한 정치적 투쟁의 서로 다른 수단일 뿐이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파괴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의 정치적 결과다

“전쟁 목적”의 모호함이 낳는 전략적 실패

클라우제비츠는 정치인과 전시 사령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전쟁에 들어가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은 처음부터 심각한 약점을 노출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이란의 핵무장 저지, 미사일·드론 역량 파괴, 이란의 보복 차단,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행, 지역 대리 세력 약화, 나아가 정권 교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흔들렸다.

정치적 목적이 제한돼 있으면 군사적 수단도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이 핵 프로그램 저지인지, 체제 약화인지, 정권 교체인지, 혹은 이란의 지역적 굴복인지 불명확하면 전쟁은 종착지를 잃는다. 핵시설을 폭격해도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불확실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지도부를 제거해도 새 지도부가 신속하게 들어서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호르무즈 통행을 회복해도 이란이 핵 카드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한다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타격 능력을 보여 줬다. 그러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파괴의 규모가 아니라 그 파괴가 낳은 정치적 결과다. 이란의 시설을 파괴하고 지도자를 제거했다 해도 이란의 협상력과 체제 생존 의지가 유지된다면, 이는 전술적 성공일 뿐, 전략적 승리라고 할 수 없다.

“무계중심”을 잘못 짚은 전쟁

클라우제비츠의 ‘무계중심(또는 중심重心)’ 개념은 이 전쟁의 오류를 잘 드러낸다. 중심은 적의 힘이 가장 응축된 곳이자 결정적 타격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중심을 최고 지도자와 핵·미사일 시설로 판단했던 듯하다. 그러나 두 달이 넘는 전쟁은 그 판단이 잘못됐음을 보여 준다.

이란의 중심은 특정 개인이나 공간이 아니다. 이란의 중심은 국가기구, 혁명수비대, 안보 관료층, 반미·반이스라엘 민족주의, 제재 속에서 작동해 온 통제 장치, 그리고 레바논·예멘·이라크 등의 동맹망이 결합한 체제 생존 능력이다. 지도부 제거가 이 구조 전

체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공격은 허공을 치는 일격에 그친다. 실제로 이란은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해협과 핵물질, 지역 전선을 활용해 협상력을 유지하려 한다.

반면 미국의 중심은 단순히 항공모함이나 폭격기가 아니다. 미국의 진정한 취약점은 국내 정치적 지속 의지, 동맹 관리 능력, 에너지 가격, 그리고 세계 패권 전략의 우선순위다. 미국 국민은 중동에서의 또 다른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다. 유가와 휘발유 가격 상승은 미국 국내 정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경론과 전쟁 불합론이 충돌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약자는 강자의 군사력 자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강자의 정치적 지속 능력을 공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중심도 살펴야 한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온주의자들은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을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가자와 레바논에서의 전쟁 지속, 국제적 고립, 국내 정치 불안에 노출돼 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전쟁 조절 요구와 충돌하면서도 공격을 지속하려는 것은, 이 전쟁이 미국의 전략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및 지역 패권 전략과도 맞물려 있음을 보여 준다.

“삼위일체”의 균열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전쟁의 삼위일체”는 전쟁을 국민의 열정, 군대의 우연과 개연성, 정부의 이성이 상호 작용하는 현상이다. 이 틀로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처음부터 균열을 안고 있었다.

미국은 군사력이 강하지만 국민의 전쟁 열정은 약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실패 경험은 중동 지상전과 장기전에 대한 깊은 피로를 남겼다. 정부는 핵 저지와 해협 재개, 동맹 관리, 유가 안정, 국내 정치적 압력 사이에서 동요한다. 군대는 이란을 타격할 수 있으나, 이란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스라엘은 정부와 군대의 공격성이 강하지만, 그 공격이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레바논 전선과 가자 전쟁, 이란과의 직접 충돌이 겹치면서 확전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립과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

이란 측의 삼위일체도 안정적이지 않다. 이란 정권은 외부 공격을 내부 결속과 민족주의적 동원에 활용한다.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적을 패배시켰다”는 말로 국민의 인내와 통합을 요구한다. 그러나 제재, 완만한 전쟁 피해 복구, 경제난, 인터넷 통제, 정치적 억압은 대중의 불만

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란 지배자들의 약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외부 공격은 정권에 반미 대의명분을 제공하지만, 장기전과 경제 파탄은 체제의 사회적 기반을 조금씩 잠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전쟁의 불안정성은 양측 모두에서 비롯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속 능력이 취약하고, 이란은 비대칭 저항 능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다. 클라우제비츠식으로 말하면, 관련 당사자 모두 “삼위일체의 세 자석”이 안정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진 출처: Iranian Foreign Media Department

미군 폭격으로 숨진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묘역

방어자는 사회적 지지나 공포를 활용하는 데 반해 공격자는 동맹관리, 국내 여론, 국제적 정당성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

“전쟁의 안개”, 그리고 호르무즈 수령으로 인한 “마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단순한 일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것이 그가 말한 “마찰”이다. 또한 전쟁은 불확실성의 영역이며, 행동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안개 속”에 있다고 했다. 이란 전쟁은 이 두 개념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은 군사적 요충지이자 세계 경제의 신경절이다. 전쟁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은 이곳을 완전히 봉쇄하거나 통행을 지연시키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미국 국내 정치에 큰 충격을 줬다. 미국이 항공모함과 공군력으로 우세를 점하더라도 기뢰, 드론, 소형정, 미사일, 감시 레이더, 민간 선박 통제 문제는 전쟁을 지루하고 위험한 수령으로 만들었다.

둘째, 핵 문제 자체가 안갯속에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여러

핵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상됐으나,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과 보관 상태, 지하 시설의 손상 정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폭격당한 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나, 이란과의 협력은 크게 손상됐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군사적 성공은 곧바로 정치적 확실성으로 바뀌지 않는다.

셋째, 이 전쟁은 단일 전선에 머물지 않는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친이란 세력, 걸프의 미군 기지, 이스라엘의 공습, 미국의 해상 작전이 서로 연결됐다. 한 전선의 ‘제한적’ 공격이 다른 전선의 보복을 부르고, 그 보복이 다시 협상을 흔든다. 얼마 전 미국의 호르무즈 인근 이란 시설 타격,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 이란의 대이스라엘 미사일 발사 등은 바로 그런 연쇄의 사례다. 지도자들은 폭력을 계산한다고 믿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우발과 오판이 계산을 압도한다.

“방어는 공격보다 강하다”

클라우제비츠는 방어를 공격보다 강한 전쟁 형태로 봤다. 이 말은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전략적 관찰이다. 방어자는 영토와 시간, 사회적 지지나 공포,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다. 공격자는 더 큰 이동 거리, 보급, 동맹 관리, 국내 여론, 국제적 정당성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

방어전의 이점

이란은 군사적으로 미국·이스라엘보다 약하지만, 방어전의 이점을 활용한다. 정규전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충돌을 피하거나 제한하면서, 해협 통제, 미사일·드론, 대리세력, 핵협상, 반미 여론을 결합한다. 이는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전형적 방식이다. 미국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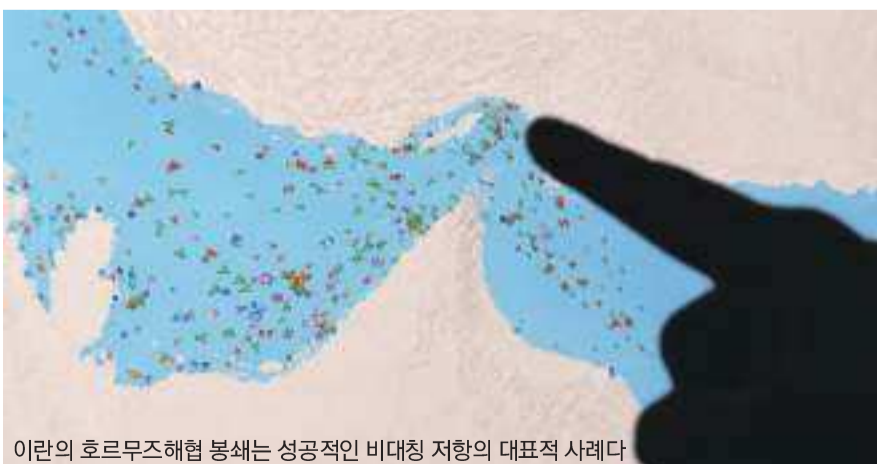
스라엘이 이란 본토와 시설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그 파괴가 이란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전쟁은 장기 소모전으로 전환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전쟁의 정점” 문제가 제기된다. 공격은 어느 순간까지는 성과를 낸다. 그러나 그 정점을 지나면 추가 공격은 더 큰 정치적 비용을 초래하고, 군사적 성과는 줄어든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상당한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를 확정적인 정치적 결과로 전환시키지는 못했다. 이란은 큰 피해를 입고도 협상 테이블에서 해협, 제재, 자산, 핵물질 문제를 들고나왔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중간 합의는 전쟁의 근본적 해결이라기보다 일시 정지시키는 봉합에 가깝다.

미국의 더 큰 전략: 중국이 드리우는 그림자

이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 전체와 분리돼 있지 않다. 미국의 더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이란 전쟁은 군사 자산과 외교적 주의력, 정치적 에너지를 중동에 묶어둔다. 또한 이란 전쟁은 중국에 미군의 실전 운용 능력, 무기 체계, 해상 봉쇄 방식, 동맹 조정 능력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한

다. 따라서 이란 전쟁이 중국 견제라는 더 큰 전략 목표에 기여하기보다 미국의 자산을 소모하고 세계 경제의 불안을 키운다면, 이는 클라우제비츠가 경고한 바로 그 상황, 즉 “수단이 목적을 잡아먹는” 국면이 된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어야 하지만, 정치가 전쟁을 제어하지 못하면 전쟁은 자기 논리에 따라 확장된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성공적인 비대칭 저항의 대표적 사례다

세 가지 전망

첫 번째 가능성은 회색지대 전쟁의 장기화다. 직접적인 공습은 줄어들지만 해협 긴장, 대리세력의 공격, 사이버전, 제재와 봉쇄, 제한적 보복이 반복되는 형태다. 이는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다. 겉으로는 전면전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전쟁 상태가 일상화된다.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가격 상승, 경제난, 난민 발생, 억압 강화, 생필품 가격 폭등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제한전의 재확전이다. 이란의 핵 임계점 돌파 의혹, 이스라엘의 추가 선제타격,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군 사망자 발생, 레바논 전선의 대규모 확대, 민간인 대량 피해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 현재 양측 모두 전면전을 피하려 하지만, 언제나 전쟁에는 극단으로 치닫는 속성이 있다.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이성이지만, 걱정과 우발성이 그 이성을 압도할 때도 많다.

세 번째 가능성은 중간 합의이자 잠정 봉합이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60일가량 연장하고 호르무즈 통행을 부분 회복하며, 일부 제재 완화와 자산 동결 해제를 맞바꾸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전쟁은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지만, 핵물질과 사찰, 이스라엘의 공격, 헤즈볼라와 레바논 문제, 이란의 지역 영향력 등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종전은 아니다.



미국은 정치적 목적이 모호한 탓에 전쟁의 종착지를 잃어버리고 있다

결론: “군사적 우월이 정치적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클라우제비츠가 오늘날의 이란 전쟁을 본다면 군사적 승패보다 정치적 목적이 명확한지 물었을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막대한 물리적 타격을 가했으나, 이란의 체제와 전략적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이란은 피해를

입었으나 이를 반미 동원과 협상 지렛대로 전환해 왔다. 미국은 압도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전쟁의 끝을 어떻게 규정할지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쟁의 본질은 강대국이 제한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약하지만 끈질긴 지역 중견국을 굴복시키려는 싸움이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이 과도하거나 모호하면 군사력은 오히려 전략적 교착을 낳는다. 미국의 가장 큰 위험은 군사력 부족이 아니라 목표의 과잉과 모호성이다. 이란의 가장 큰 위험은 비대칭 저항의 성공을 과신하다가 통제 불가능한 확전을 불러오는 일이다. 이스라엘의 위험은 군사적 선제공격이 장기적 안보를 보장한다는 착각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전쟁은 미국 제국주의와 이스라엘 아류 제국주의의 합동 압박이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기는 커녕 지역 전체를 더 위험한 불안정 속으로 밀어 넣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란 정권의 억압성과 반동성은 분명하나, 외부의 폭격과 봉쇄가 이란 민중을 해방시키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란 정권에는 내부 결속의 명분을 주고, 민중에게는 경제난과 전쟁 공포를 떠넘길 뿐이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지만, 일단 시작되면 정치가 완전히 제어하기 어려운 폭력의 논리를 지닌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진정한 쟁점은 더 정밀한 폭격이나 더 강한 압박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및 봉쇄에 반대하고, 호르무즈와 레바논, 가자와 이란을 한꺼번에 불태우는 확전에 반대하며, 중동 민중이 제국주의와 자국 지배자 모두에 대해 독자적으로 나설 공간을 넓히는 일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차가운 통찰은 여기서도 유효하다. 정치적 이성이 폭력 수단을 지배하지 못할 때, 강대국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투를 되풀이한다. 반면 약소국 지배자는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승리를 주장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탐바구니에서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늘 평범한 사람들이다.



클라우제비츠 축약판 읽기

《원서 발췌 전쟁론》

정토웅 역, 지식올만드는지식
118쪽, 14,800원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선관위 규탄 시위와 극우의 준동,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6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4층 강연장

발제 김인식 <노동자 연대> 발행인 ※ 전문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6,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 연대 서울 지역 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서울 서부

성과급 투쟁과 이익공유-사회연대임금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일시 6월 17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PLATFORM P 2층 다목적실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 전문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4,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 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서울 동부

성과급 투쟁과 이익공유-사회연대임금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일시 6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바인그림 빌딩 10층 1004호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 전문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 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5731-7299 / s-east@ws.or.kr



임단협

레미콘 노동자들은 초호황 삼성, 하이닉스 공장 건설에 기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수도권 레미콘 노동자들이 임금 파업에 들어가다

6월 8일(월) 수도권의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조합원 8,000여 명이 전면 파업을 하고 여의도에서 ‘2026년 단체협상 촉구 및 임단협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금 파업 중인 레미콘 노동자들은 레미콘 제조사에 상용직(소위 “마당차”라 불림)으로 고용돼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레미콘을 운송하는 노동자들이다.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수도권 레미콘 노동자의 90퍼센트 정도를 조직하고 있다.

이들이 운행하는 레미콘 믹스 트럭 1만 1,000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건설 현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노동자들은 운반 횟수에 따라 임금을 받으며 현재 회당 7만 5,000원 정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주5일제 근무하면서 한 달에 20일을 일하고 하루에 5회전 이상 일을 했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 하루에 한 번만 운송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레미콘 제조 시설이 기피 시설로 인식돼 서울 외곽으로 옮겨지는 추세다. 그래서 서울로 레미콘을 운송할 때는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왕복 3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면 하루 운송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레미콘 차 값도 배로 오르고, 차 할부금, 보험료, 정비료도 올라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레미콘노조 임영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레미콘 장비 믹서 차량 가격은 1억 5,600만 원의 고액입니다. 우리의 한 달 매출에서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월 지출액 305만 9,321원을 공제하면, 지난해 수도권 노동자 평균 소득이 147만 5,54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올해 초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자재협의회와의 협상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납품단가를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금 협상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측은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회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근태 관리를 하고 무단결근을 하면 계약을 해지해 버린다.

법원도 레미콘 노동자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했고, 노동부도 올해 3월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교부했다. 그런데도 사용자 측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측은 교섭에 응할 경우 향후 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을 이용해 원청인 건설업체에 직접 교섭까지 요구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이어 가고 6월 12일 서울시청에서 전 조합원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레미콘운송 노동자의 투쟁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김승섭

기고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하라

대리운전·배달·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6월 4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최임위에서는 특고·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다. 지난 3월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최임위에 요청해 안건으로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업무량과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노동자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현실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 먹고살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업무량과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 해외 사례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고리즘 통제 아래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도 대기·이동·운행 시간과 운행 거리 등을 계산해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이제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해 왔음을 보여 준다. 2023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운전 노동자의 시간당 순소득은 충격적이게도 4,250원에 불과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쿨을 잡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운행 전후 이동 시간 등은 공짜 노동이고, 프로그램 사용료와 보험료까지 노동자가 직접 부담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임위에서 한 사용자위원은 ‘대리기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대리요금을 3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 대리운전 노동자의 소득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또한 엄청난 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은 여전하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면, 최임위에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성 인정,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 보장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임위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농성을 이어 갈 계획이다. 이후에도 적정 보수와 최저임금이 적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카카오 노동자 투쟁 지지한다

카카오 노동자들이 6월 10일(수) 오전 10시부터 4시간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에는 화성식품노조 카카오지회(별칭 '크루 유니언')의 카카오 본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5개 법인 노동자들이 참가한다. 이 노동자들은 2018년 노조가 설립된 후 첫 파업에 나선 것이다. 요즘 보기 드문 원하청 연대 투쟁이기도 하다.

카카오지회는 카카오의 모든 법인을 포괄하는 노동조합이다. 카카오 전체 노동자들의 40퍼센트를 조직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실패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책임은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투쟁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파업의 핵심 요구는 성과급·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이다.

카카오 본사 노동자들은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임원들은 성과급 파티를 벌였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연봉 대비 3~9퍼센트 밖에 안 되는 성과급이었다.

2025년 카카오 본사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액은 네이버에 비해 3,700만 원 가량 적었다. <조선일보>조차 카카오 본사 노동자들이 “보상이 미진해 불만이 누적됐다”고 썼을 정도이다.

자회사 노동자 쓰고 버리는 사용자 측

카카오는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여러 자회사에 출자했다. 그러다가 고금리 시대가 되고 IT 호황이 끝나자 이번엔 실적을 개선하겠다고 하며 최근 2년 동안 자회사 약 40퍼센트를 정리했다.

카카오 자회사 노동자들은 본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카카오페이는 계속 적자였다가 2025년에 영업이익 504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은 ‘사정이 좋아지면 보수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임원 보수는 32.2퍼센트 증가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고작



카카오 원·하청 노동자들이 단결해 첫 파업에 나섰다

2.9퍼센트 증가에 그쳤다. 노조는 “실적 개선의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규탄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19년 12월 카카오에서 분사했다. 이후 노동자들의 처우는 하락하고 절반이 넘는 인원이 구조조정됐다. 노동자 일부를 본사로 복귀시키겠다는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카카오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11월 카카오가 계약을 종료하며, 일부 노동자들은 대기 발령에 놓인 채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올해 사용자 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은 총 재원 기준 2퍼센트에 불과하다.

엑스엘게임즈는 경영권 매각을 앞두고 정리해고에 들어갔다.

연대 투쟁

본사와 자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것은 공동의 사용자에 맞서는 것이므로 노동자들의 힘을 모으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투쟁의 정당성을 더한다.

<조선일보>는 “노조의 연대 투쟁이 회사와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열을 부추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을 각개격파하기 어려워졌다. 불평과 다름없다. 게다가 삼성전자 투쟁 때는 다른 노동자들을 신경 쓰지 않는 ‘귀족노조의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더니 이번엔 함께 싸우니 또 문제라고 한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 실행을 압박해 임금을 대폭 인상한 후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도 잇따르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5일간 전면 파업을 벌여 승리를 거뒀다.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도 8일 오전 8시부터 파업에 돌입해 반도체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이런 시기에 동시에 싸우면 요구를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부는 카카오 노동자들의 파업을 견제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8일 카카오 부사장을 만나 카카오톡,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안정성 확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파업 효과를 악화시키려고 사용자 측과 협조한 것이다.

카카오 노동자들의 파업에 정부까지 나서지는 것은 카카오 노동자들이 해온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카오 노동자들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런 만큼 이들에게 정당한 몫이 배분되어야 한다.

임금 부족, 고용 불안 문제는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카카오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단호하게 투쟁하며 싸움을 확대한다면 같은 처지의 다른 노동자들을 자극할 수 있고, 이는 카카오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에도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카카오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안형우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공개 토론회 영상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70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규정 자체는 과장이 아니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에는 과장의 여지가 있다. 두 층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법적·개별적 층위에서는 과장이 아니다.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선거권은 단순한 “투표할 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투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송파·강남·광진 등 일부 투표소에서 마감 시각까지 줄을 섰다가 돌아간 유권자나 서너 시간을 대기한 유권자에게는 선거권의 구체적 행사가 실제로 봉쇄됐다.

MBC 보도에서 변호사들이 당일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현장에서 서너 시간 기다린 유권자라면 모두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하고 무조건 배상이 성립한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배상이 성립한다는 것은 곧 침해된 법익(선거권)이 존재했다는 뜻이므로, 적어도 이들에게 “참정권 침해”는 수사가 아니라 사실 기술이다.

그러나 정치적·체제적 층위에서는 과장이 개입한다.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규모의 비약이다. 문제가 된 곳은 서울 22개 투표소이며, 이것이 광역 단위 당락을 뒤집었다는 상황은 아직 없다. 국지적 관리 실패를 마치 선거 전반에 대한 참정권 박탈과 동일



선관위의 과실과 의도적 결과 조작인 부정선거는 구별해야 한다

시하면 비약이 생겨난다.

둘째, 고의(침해) 대 과실의 프레임 혼동이다. 드러난 상황은 송파에서 본 투표 대상 유권자의 약 50퍼센트 분량만 인쇄했고, 구·서울·중앙 선관위 어느 단계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안일한 대처, 즉 명백한 과실이다. 그런데 “침해”라는 말은 능동적 가해를 함의하기 쉽고, 여기에 “부정선거” 서사가 더해지면 과실이 음모로 둔갑한다.

이재명조차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표현하면 서도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시

했다. 하지만 ‘관리 실패의 규명’과 ‘범의(犯意: 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의 수사’는 다른 영역이다. 후자로 끌고 가는 순간 사안의 성격이 변한다.

셋째, 따라서 핵심은 과장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다. 여기서 참여연대의 선긋기가 적절하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건일 뿐,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부정선거와는 거리가 멀다. 정당한 분노를 음모론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 측이 헌법소원과 함께 투표지 반출·폐기 금지 가처분을 예고한 데서 보여 주듯, ‘참정권 침해’라는 용어는 이미 부정선거 진영의 진입로로 전유되고 있다. 여야 모두 수습보다 정략적 계산에 몰두하면서, 공방이 길어질수록 음모론과 선거 불신만 커지는 국면이다.

따라서 참정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과장으로 치부하기보다, ‘참정권 침해’가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언어인지 아니면 선거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언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라면 노태우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나 국가배상 청구 등은 정당한 비례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후자(재선거·개표소 봉쇄·부정선거론)로 흘러간다면 이는 과장을 넘어 사안을 위험하게 재정의하는 일이다.

정치인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서로 실제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논쟁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따져야 할 지점이다.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12면에서 이어짐

극우는 정당한 불만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

여러 언론이 주목한 6월 6일(토) 낮 송파 개표소 봉쇄 시위는 잠실7동 개표소 시위를 주도한 극우 청년들이 이 동해 진행한 5일 시위와 양상이 조금 달랐다.

밤새 시위대 지휘부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참정권”과 “재선거”를 핵심 구호로 삼고, 외치는 구호는 “재선거”로만 하기로 했다.

6일 핸드볼경기장 주변 곳곳에는 “재선거” 구호만 외치고 태극기 외 깃발(성조기, 이스라엘기 등)은 들지 말자는 대자보가 붙었다. 그러나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성조기가 현장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시점에서 송파 개표소 시위를 주도한 극우 청년들은 제한된 구호만 외치는 것이 공평무사하게 선거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봤을 것이다.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가처럼 보이게 하려고 출력된 팻말을 금지하고 스케치북에서 뜯어낸 도화지에 매직으로 “재선거,” “We are fighting for rights to vote” 등 통일된 구호를 써서 참가자들에게 나눠 줬다.

때마침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는 전광훈·전한길, 국힘 김민수가 주도한 집회 등이 크게 열렸다. 윤어게인 파들이 대놓고 이번 사태를 반이재명 투쟁(심지어는 하야 투쟁)으로 이어 가려고 연 집회였다.

즉, 6일 낮에는 강성파들이 없었다. 그 덕에 딱히 극우가 아닌 시민들이 낮에 농성장에 와서도 큰 부담을 느끼

지 않은 듯하다. 즉, 주도자들의 위장과 6일 도심 집회들로의 동원 분산 때문에 올림픽공원은 비극우 시민들이 주도한다는 착시가 일어났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송파 개표소 봉쇄 농성도 극우 청년들이 초기부터 주도했다. 그들은 구호를 조율하고 음식 등 지지 물품, 시위 물품 등을 관리·배분했다. SNS 등의 ‘애국 시민’들에게 시위 지원을 호소했다. 그 와중에 아이유, 박보영 등 윤석열 탄핵 운동을 지지했던 연예인들에게 조직적으로 악플이 달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잠실7동에서든 올림픽공원에서든 그들은 건물 출입자, 주변 행인, 택배 기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검문·검색을 거칠게 벌였다. 신분증 제시, 가방 검색, 중국인 여부 체크(“시진핑 개×× 해 봐!”), 폭언 등을 일삼았다. 심지어

어 혐종파 이준석마저 ‘당신 엄마 중 국인이냐’는 공격을 받았다.

농성자들은 자신들을 제지하는 경찰들을 “공안”이라고 불렀다. 중국에서 경찰을 “공안”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참가자들은 위협을 느꼈다. 그 반대는 전혀 아니었다.

지금은 6일 밤부터 당일 도심 집회에 갔던 이들이 대거 올림픽공원에 합류하면서 농성자들 내부 판도가 바뀌었다. “재선거” 구호를 “부정선거 재선거”로 바꾸자는 쪽이 다수가 된 듯하다.

그 뒤로 청소년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핸드볼경기장에 훈련용 물품을 가지러 왔다가 둘러싸여 봉변을 당했다. 부정선거 증거를 빼돌리려는 것이라며 둘러싸고 가방 등을 뒤졌다. 양말까지 벗겨 보자는 말까지 나왔다.



극우의 “재선거” 요구에 동조하지 마라

김문성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사태가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극우는 이 사태를 교활하게 이용하고 있다.

송파구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 시위에 동참한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은 지방선거 전체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대중의 정당한 불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힘 다수가 오세훈 당선 후 재선거 얘기를 거둬들였지만, 나경원은 기회주의 우익답게 재선거를 지지하면서도 그것이 가능하려면 선거법부터 바

꿔야 한다며 신중론과 재선거론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다.

잠실7동 투표소 시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에 국힘 장동혁, 김은혜, 자유와혁신 대표 황교안, 전한길, 그리고 국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미국 극우 모스 탄이 방문했다.

이들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해 온 대표적 윤테이인 정치인들이다.

다수 언론이 이 시위를 “개표소 시위”, “개표소 봉쇄 시위”라고 지칭하는 반면, <조선일보>는 “참정권 시위”라고 명명했다. <조선일보>의 우익 성향에 비춰 볼 때, 이는 선관위 규탄 정서를 우파 쪽으로 포섭하려는 지칭이다.



일반인들이 선관위를 규탄하고 불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과, 극우 세력이 주도면밀하게 “참정권”과 “재선거”를 외치는 것은 다르다

선관위 규탄은 정당하지만 재선거 요구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규탄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 때문에 정치 체제에 불신이 큰 사람들은 재선거도 요구해 볼 만한 일이라 생각하기 쉽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투표를 독려하던 나라에서 선거 관리만 전담하는 헌법기관이 유권자 수만만큼 투표용지를 인쇄하지 않아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것은 정치적 경험적 보통의 청년들에게 매우 충격적 일 수 있다.

게다가 발표 때마다 진상이 조금씩 달라진다.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낸 투표소가 67곳이라고 하더니, 8일 저녁 발표에서는 총 140곳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고 그중 91곳에서 실제로 이 투표지가 쓰였다고 밝혔다. 3일 만에 투표지 추가 송부 투표소는 73곳,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에서 41곳이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투표소 26곳에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서울 22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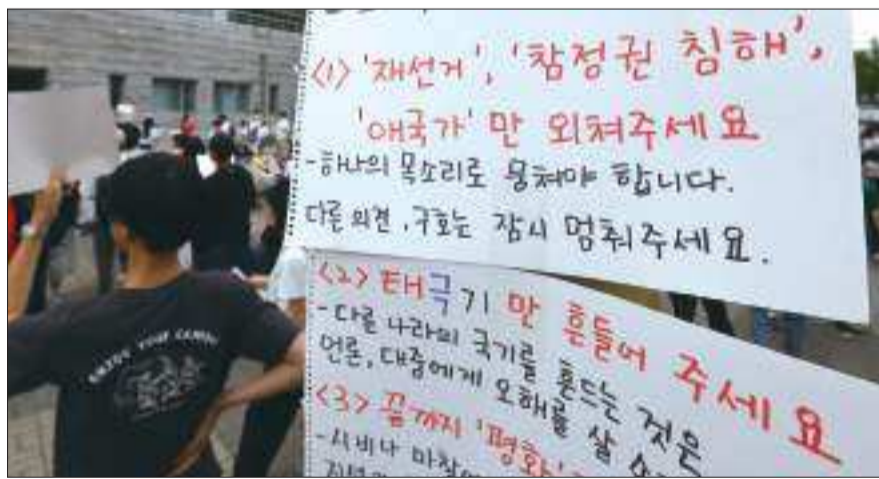
이러니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거 부실 관리가 투표권 행사에 지장을 주기는 했으나, 일반적인

로 투표권 자체가 박탈됐다고 할 수는 없다. 투표용지 부족 선거구에서 공식 투표 시간 종료 후에도 연장 투표가 실시됐고, 의도적인 선거 결과 조작(부정선거)의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 규탄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조사와 수사 등을 통한 책임 규명과 징계,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난주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들이 발표한 선관위 규탄 성명이 그랬다. 학생 대표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분명히 거리를 뒀다.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 극우 세력은 개표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재선거”를 요구했다. 부정선거 증거도 없고 선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부터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선관위를 규탄하고 불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과, 극우 세력이 주도면밀하게 “참정권”과 “재선거”를 외치는 것은 다르다.



극우가 재선거로만 구호를 제한한 것은 책략이다

윤테이인 세력에게는 두 구호는 선택된 단어다. 중국과 북한이 한국의 민주당, 좌파들과 손잡고 한국을 독재 체제로 만들려고 몰래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부정선거 ‘원천 무효’와 좌파 척결이 독재에 맞서 ‘참정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 그들의 서사다. 이 서사는 윤테이 친위 쿠데타의 명분이었다.

그들이 3·15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지난해 ‘국민저항권 발동’ 선언

이후 벌인 서부지법 폭동을 자신들이 4월 혁명에 빚댄 것의 연장선이다.

재선거 구호와 참정권을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은 극우 대중에게 보내는 위장 신호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재선거의 실현 가능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운동 지휘부가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낌새도 전혀 없다.

이 점만 봐도 극우 세력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